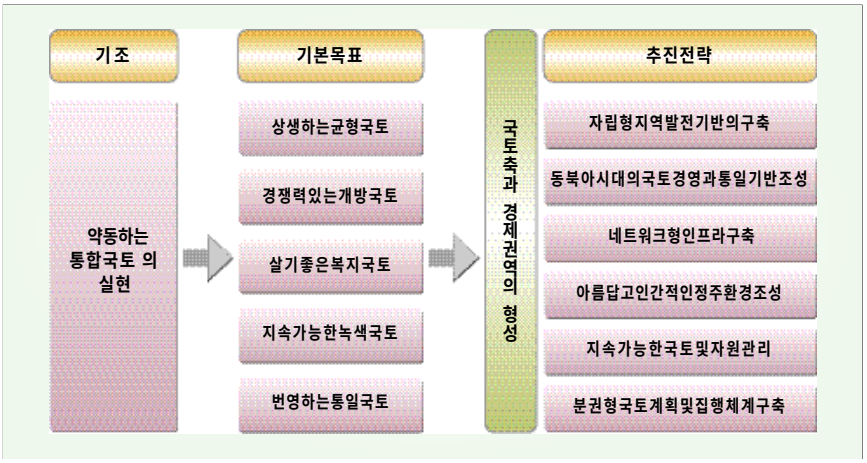
약동하는 통합 국토 실현 - 균형 · 개방 · 복지 · 녹색 · 통일 지향

-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개방형국토축과다핵연계형국토구조제시 -

이번에새로 마련된 제4차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은 원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이념인‘ 21세기통합 국토 실현 ’을 계승하면서제4차국토종합계획수립이후진행되고 있는국내외여건변화를반영한새로운국토전략으로제시되었다. 이번수정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혁신도시건설등국가균형발전을 위해추진되고있는 주요국정의내용을반영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글로벌화하고있는국제경제환경의변화와남북한교류협력확대에대응하기 위한정책과제를 반영하였다.

수정 계획의 기본 틀



약동하는 통합 국토 실현

이번에새로 마련된 제4차국토종합계획의 기조는‘ 약동하는 통합 국토의 실현 ’으로국토의통합과함께국토의경쟁력을강조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이 기조에는 2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국가의 도약과 지역의 혁신을 유도하는 약동적 국토 실현을 담고 있다. 즉, 저비용 고효율의 국토를 조성하여세계속의 일류국가로도약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고, 지역별로는특색있는전략산업의육성과혁신주도형지역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는지역간 균형 발전과남북이상생하는통합 국토실현을담고 있다. 이는 지방 분산 및 분권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고 선택과집중을병행하는국토발전체계를 구축하여국토이용의효율성을증대하는한편, 남북한및동북아 국가와의 상생적 협력을 선도하는 초국경적국토경영기반을구축하는것이다.

균형 · 개방 · 복지 · 녹색 · 통일국토가 목표

‘ 약동하는 통합 국토의 실현 ’을 위한 기본 목표는 5가지로 설정하였다. 균형국토, 개방국토, 복지국토, 녹색국토, 통일국토 등 5가지 목표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라는 이념과 함께 인본주의적 국토의실현을반영하기위해설정되었다.

먼저,‘ 상생하는균형 국토 ’는 분산형 국토구조를 형성하고, 지역별로특화된발전기반을 구축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것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 권역간 · 도농간의연계와협력을통한상생적발전체계를구축하고참여와합의의국토정책추진체계를정립하는것이다.

둘째,‘ 경쟁력있는개방 국토 ’는동북아 물류 · 금융 · 교류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국토개방거점을확충하고상생적국제협력을 선도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단지 및 농 · 산 · 어촌의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해 혁신주도형국토발전기반을확립하는것이다.

셋째,‘ 살기 좋은 복지 국토 ’는 도시 및 농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국토를 조성하고취약계층및사회적약자의삶의질을 배려하여 주거 복지를 증진하고 도시 환경 및교통시설을개선하는것이다.

넷째,‘ 지속 가능한 녹색 국토 ’는 국토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 개발을 강화하고 국토 생태망 구축과 연결성을 강화하여아름다운국토를조성하고깨끗한 물의안정적공급체계를확보하는한편전방위재난관리체계를구축하여재해걱정이없는안전한국토를조성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번영하는 통일 국토 ’란 한

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과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 남북간 협력체계를 정립하고, 남북한 경제협력과 국토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반도 통합 인프라 구축과 국내외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π형 국토 축과 다핵 연계형(7+1) 국토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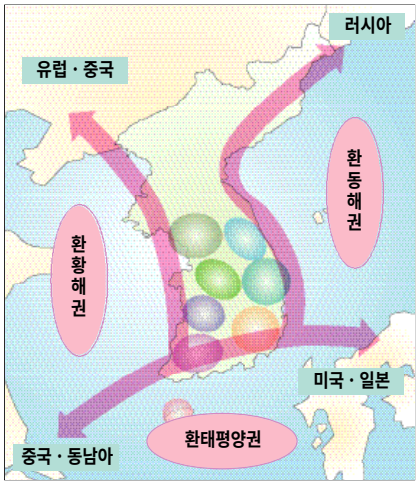
국토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과 경쟁 우위 개념이 확보된 국토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이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개방형 국토발전축과 다핵연계형의 국토구조를 국토의 기본골격으로 제시하였다. 미래의 국가성장동력의 창출과 지역통합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개방성을 지향하고, 국내적으로는 지역간 연계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토구조의 구축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유라시아대륙과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개방형의 국토 축(π형)을 구축하기로 하고 남해안 축, 서해안 축, 동해안 축 등 3개 연안축을 형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간 상생을 촉진하는 다핵 연계형 국토 구조를 제시하였는데, 다핵연계형 국토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단위로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과 제주도 등 7+1로 경제권역을 설정하였다. 지방의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권역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간적 기본단위로 육성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6대 추진 전략

앞에서 언급한 5가지 기본 목표와 공간구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는 자립형 지역 발전 기반의 구축, 동북아 시대의 국토 경영과 통일 기반의 조성,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약동하는 통합 국토의 구도



의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분권형 국토 계획 및 집행 체계 구축 등 6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전략별 추진계획을 보면 먼저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을 위해서는 수도권 기능의 지방 이전,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산어촌의 개성있는 발전, 전략산업의 육성과 혁신클러스터 형성, 차별화된 문화관광시설의 개발 등이 주요 골자이다. 둘째,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전략은 개방국토를 위한 동북아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계획 등이 제시되고 있다.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전략을 위해서는 국가 기간 교통망의 확충, 교통 투자의 효율성 제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통 체계 구축, 시공 자재(時空自在)의 국토 구현 등의 계획이 제시되고 있다.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아름답고 살고 싶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네트워크형 도시 체계를 확보하며, 주거 복지 수준 향상 등의 계획이 제시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국토의 조성, 깨끗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 재해에 강한 국토 기반 조성 등의 사업이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전략에서는 국토 계획 및 집행의 거버넌스 구축, 갈등 조정 시스템의 구축, 지역 주민 참여 등의 계획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주요 실천 과제

개방형 · 다핵 연계형의 국토 구조를 성공적으로 형성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토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개방형의 국토 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와 세계를 향하는 글로벌 개방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 즉,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국제자유도시 등의 육성과 관광, 정보 등 다양한 개방 특구를 지정 및 개발한다. 또한,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등의 동북아 물류 허브 육성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 및 항만 배후 지역을 개발하며, 접경지역을 평화 지대로 전환시키기 위한 교류협력지구의 개발과 교통망의 연결, 수자원 및 환경관리 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시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다핵연계형 국토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시책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균형발전하는 다핵분산형 국토구조 형성의 전기로 활용하고, 7+1 경제권역은 경쟁력 있는 특화 산업을 기반으로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의 국제경쟁을 위한 기본 단위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가 지방의 혁신주도형 발전을 견인하며, 권역 내외의 지역과 긴밀한 연계 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산업, 관광, 문화, 남북교류 등 광역차원의 특성화된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권역 및 주요 혁신거점 간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초고속 기간 교통망 및 정보망을 구축토록 할 필요가 있다. CJ

서태성
국토연구원 국토계획 · 환경연구실장